

 		<h1>보도참고자료</h1> <p>2020. 2. 21.(금) 배포</p>	
보도일	배포즉시		
담당과	고등교육정책과	담당자	서기관 정상은 (☎ 044-203-6918)

교육부-서울시 중국 입국 유학생 대책회의 결과

- ◆ 3월 개강 대비 교육부-서울시 중국 입국 유학생 대책회의 개최
- ◆ 서울시, 중국입국 유학생 공동대응단 구성·운영, 유학생 공항 입국 단계 수송 지원, 의심증상자 등 임시거주공간 마련, 기숙사 외 거주 학생 모니터링 인력 지원하기로 결정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3월 대학 개강을 앞두고, 유학생들의 집중 입국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중국 입국 유학생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.

-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, 유학생 밀집지역 구청장 9명(중구·종로구·성동구·광진구·동대문구·성북구·서대문구·마포구·동작구)과 유학생 1천명 이상 대학 총장(건국대, 경희대, 고려대, 동국대, 성균관대, 이화여대, 중앙대, 한양대, 홍익대)이 참석했다.

□ 서울시 등 지자체는 교육부와 대학이 유학생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빠르게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다.

- 대학들은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·지원 조치 중, 대학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시설과 인력의 확보 등*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.

* 학생 수용 시설의 확보, 입국 2주 이내 학생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 보강, 대학 시설 및 인근지역 주기적 방역 등

- 오늘 대책회의를 통해 서울시는 중국입국 유학생 공동대응단 구성·운영, 유학생 공항 입국단계 수송 지원, 의심증상자 등 임시거주공간 마련, 기숙사 외 거주 학생 모니터링 인력 지원하기로 결정하고,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.
 - 첫째, 중국에서 유학생이 입국할 때, 대학이 학생들을 자체 수송하기 어려운 경우, 자치구와 서울시가 셔틀운행과 비용을 지원한다.
 - 둘째, 대학이 기숙사, 대학 유희시설에서 유학생을 우선 수용·관리하되 서울시와 자치구가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을 활용하여 임시 거주공간을 확보해 지원한다.
 - 임시거주공간은 입국 후 의심증상자 중 음성 판정을 받은 유학생,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판명되어 자가격리를 통보 받았으나 갈 곳이 없는 유학생 등을 우선 지원한다.
 - 셋째, 기숙사 외에 거주하는 유학생에 대한 대학의 모니터링 인력이 부족할 경우, 자치구와 서울시가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.
 - 아울러, 대학교 임시거주공간, 대학교 밀집지역에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.
- 교육부는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위해 대학 및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예정이다.
 - 교육부는 중국 입국 유학생 중 기숙사 외에 거주하는 학생 연락처 등 모니터링에 필요한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고, 코로나 19 대처 단계별 상세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제시하겠다고 밝히고,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최선을 다하여 철저한 지역 방역망 체제를 구축하고 점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.

